특/별/기/고

안순일

신종플루, 슬기롭게 대응을

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 공포에 떨고 있다.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리고, 신종플루의 항바이러스제로 알려진 '타미플루'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사실 멕시코에서 사람·돼지·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것이 지난 4월임에도, 우리는 치료약과 백신만 갖추면 무사히 넘길 것이라는 안일함에 젖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올 가을에 신종플루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학생들의 개학철과 맞물리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우리 광주에서도 벌써 3개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확산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환자 발생 학교에 대해 발생 경로, 발생 시 조치 사항, 대처 방안의 적절성 등을 즉각 검토하는 등 확산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감으로서도 발생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눈으로 점검하고 추후 대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감염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교육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의 비율이 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원가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염된다며 손을 씻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 씻기를 기본으로 한 예방 수칙 매뉴얼을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생들이 상시 휴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수칙을 담은 책자도 보급했다.

또한, 가을 수학여행이나 소풍, 운동회 등 단체 행사 일정을 조정해 2차 감염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휴교나 개학연기에 따른 수업 결손 보충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0월 중순이나 11월 초까지는 백신이 출시된다 하므로, 모든 학생이 먼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특히 수능시험을 불과 70여 일 앞둔 일선 고등학교의 경우, 환자 발생으로 인한 수업 결손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소독 장비 및 소독약 구입을 위해 예비비 8억7천여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 특별지원금은 학교 및 학급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재량권을 위임함으로써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28만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평소 가정에서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함도 강조하고 싶다. 따갑게 들으면서도 실행을 주저했던 것들, 즉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수면 및 휴식, 균형 잡힌 식사, 운동 및 체중관리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때다.

신종플루에 걸리더라도 99.9%는 저절로 회복되고, 감염자 1,000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지만 이 중에서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은 사망자가 0.3명에 불과하다는 낙관적인 예측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보면, 방역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감염자는 전체 인구의 20%, 입원환자 20만 명, 사망자는 2만에서 4만 명까지 예상된다고 한다.

1958년의 아시아 독감으로 9만 8000명, 1968년의 홍콩독감으로 4만 5000명이 사망한 것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전 기관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비켜갔던 2003년의 사스(SARS, 중증 호흡성 증후군)를 김치 덕분으로 돌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는, 우리나라는'이라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에서의 위생·안전 교육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도 만전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시책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광주시교육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광주 U대회 유치 100일, 준비 차질 없나

어제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100일이 되는 날이다. 광주시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전세계 대학생의 스포츠 제전인 하계U대회 유치에 성공,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5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원국인 170개국 1만5천여명의 선수·임원, 5천여명의 심판·운영진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광주에서 2천여명이 참석해 FISU 집행위원을 뽑는 집행위원회 선거와 전 세계 대학 총·학장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다 오는 2012년, 2014년에는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도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광주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국제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학 총·학장 등 2만명이 넘는 석학들이 모이는 자체만으로 광주의 국제위상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빈틈없는 준비로 완벽한 대회가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성공개최의 여부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현재 광주의 여건으로 볼 때 앞으로 남은 5년의 준비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광주 U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대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U대회 지원특별법'과 '조직위' 구성 등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대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을 접대하고 세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광주시민의 의식 선진화가 시급하다.

2015 광주 U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대회 유치 100일이 성공개최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개헌논의 정략적 접근 경계한다

개헌논의가 수면위로 본격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한 복수의 개헌안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변경의 필요성에는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개헌을 목표로 결성된 의원연구모임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는 여야 의원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체제가 21세기 국내외 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이견 조율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내년 상반기 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내 여론은 지방선거 이전 개헌은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힘든 이때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헌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과거 당리당략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희석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셈법 역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권력구조 문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와 맞물려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면 첩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개헌 공론화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이 그동안의 불신을 털고 충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개헌 논의는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

기 고

최창열

기업투자 여건을 만들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어,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조기 탈출의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과 무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충격을 더욱 크게 받았으며, 국내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과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동안 높은 지가와 임금으로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어 중국 등 해외로의 공장 이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 이는 결국 안정된 일자리 축소, 중산층 감소로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 토지 측면에서 볼 때 2006년 기준으로 GDP대비 지가총액이 캐나다는 0.3배, 미국 1.8배, 일본 2.5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배에 이르고 있어, 높은 지가는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권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이 낮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불황시에는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확보와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지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용지를 비축해 나가는 것이다. 광주·전남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대부분 80~90년대에 착공하여 준공된 단지들로서 대불산단은 분양완료되었고, 광주첨단 1단계 94.1%, 평동1차 산단 98.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평동2차 산단과 광주첨단2단계를 개발중에 있으며, 신규 개발예정으로 광주전남공동국가산단인 빛그린산단이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므로 산업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기·적소에 토지를 확보해야 하겠다. 한국토지공사는 광주첨단2단계를 포함 전국에 총 10조 원의 자체자금을 투입, 매년 평균 330만㎡씩 장기임대산업용지를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공급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용지의 수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장기임대, 임대 후 분양전환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업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겠다. 광주첨단1단계의 경우 임대 96필지중 82필지가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었으며, 대불산단은 장기임대·국민임대·임대전용 등 임대 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였다. 광주첨단2단계에서 333천㎡을 최장 50년까지 장기임대로 공급추진하였는데 이중 86%인 286천㎡가 계약되었다.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첨단2단계에서는 2차분으로 올해 9월부터 250천㎡의 장기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요즘같이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는 필요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 기업이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장〉

기 고

류재선

DJ와 중국, 그리고 광주·전남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이 끝난 지난 8월 24일은 한·중수교 17주년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중국에서는 그와 친분이 두터운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탕자쉬안(唐家璇)을 단장으로 11명의 조문단을 파견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까지 '나의 오랜 친구'가 한반도 평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 중국을 7번이나 방문했으며 마지막 해외 방문지도 중국이었다.

한중간의 교류는 눈부실 만큼 성장했다. 항공 직항로편만 보더라도 국내 6개 도시와 중국 31개 도시에 매주 830편에 이른다. 이것은 미국(260편), 일본(417편)과 비교 2~4배가 많다. 인적 물적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370만, 유학생 7만이 머물러 있다. 92년 수교 당시 50억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량이 1,861억 달러로 37배 성장하여 미국을 제치고 제1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중국도 한국이 3대 교역 대상국이다.

다행히도 우리 광주에는 중국총영사관이 있다. 광주시의 대 중국 숙원사업 일환으로 끈질긴 노력 끝에 2007년 3월 23일 영사사무소로 첫 문을 열고 지난 6월에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외국 공관으로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들어선 것이다.

광주와 전남·북 제주도까지 관할권을 두고 있는 중국총영사관이 있음으로써 산업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화교 등 15,0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우선적으로 보호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서남해안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등 각종 해상 분쟁의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연간 약 15만여 명이 서울에서 비자발급을 받았는데 광주에서 비자발급으로 시간절약과 경제적인 면에서 약 40억 정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광주의 여행 전문가는 말했다. 상해 항주 절강성 등 중국의 30개 도시 성들과 교류를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중국총영사관에서 많은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광주에서 가까운 무안공항은 중국 상해까지 비행기로 기껏 1시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내수시장으로 성장했고, 광주와 전남경제를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의 무한한 내수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각 분야, 자치단체 등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살아생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토록 애를 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구를 이끌고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방문, 한중간 영원한 동반자로서 관계강화를 중국에게 촉구했다.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 보면서….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산업근로자 화교 유학생 등 모든 중국인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세심한 사회적 배려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북부경찰서 상황실장〉

가고 싶은 농촌 '웰촌' 적극 홍보해야

도시인들은 웰빙을 외치고 있지만 요즘 우리 농촌에는 작지만 큰 목소리로 '웰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과거의 힘들고 노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고픈 삶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래서 웰촌이 생겨난 것이다. 웰촌(welchon)이란 Well-being 농어촌, Welcome to 농어촌, Well Know 농어촌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인데 과거에 낙후되고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만 생각되던 농어촌을 가고 싶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보는 개념이다.

전원적 풍경과 푸근한 인심이 기다리는 우리 농촌에 도시인들의 귀향이 늘어나고, 도시 거주자들도 내 집처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웰촌을 적극 홍보하고 퍼트리자. 특히 다가오는 추석 때는 고향을 찾아온 출향인사, 친구, 친척들에게 이런 웰촌을 더 많이 알려주자. 언제나 웰컴 투 농촌이 되도록….

▲이숭열·목포시 옥암동

돌·시멘트로 쌓은 축대, 하천 생태계 파괴한다

하천변에 차도만큼 널찍한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그리고 여름철의 폭우와 하천 범람시 안전과 하천 제방의 유실을 막기 위해 하천과 하천변 둑이 만나는 부분은 석축 혹은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돌과 시멘트로 쌓은 축대가 하천을 따라 수백 미터 설치됐는데 이런 인공구조물은 동식물 이동을 막고 여름철 온도가 높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요즘은 심지어 대도시의 경우 하천제방은 물론 바닥에까지 돌을 깔아 놓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하천에 물이 쉽게 흘러내린 후 바닥은 말라버리는 건천이 되고 만다. 작은 시군의 실개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하천변에 암석을 쌓고 포장된 통행로를 만들어 놓는데 이건 무늬만 생태하천일 뿐이다.

하천의 범람과 민가 혹은 농작물이 자라는 논밭에 홍수가 날 위험이 있다면 석축과 콘크리트로 막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만든다며 모든 하천에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고 심지어 하천 바닥까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 시군 자치단체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신영하·광주시 북구 대촌동

無 等 鼓

자민당

2009년 8월 30일. 세계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매듭이 지어졌다. 바로 54년 동안 일본을 지배해왔던 최대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사건'이 벌어졌다.

1955년 11월에 결성된 이래 줄곧 집권해온 자민당은 기업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수세력을 대변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전체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해 119석에 그친 자민당을 소수 야당으로 전락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뤘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뒤 창당된 자민당은 경제부흥이라는 일본의 국가적 목표 덕분에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당시 일본 국민은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경제발전에 있다는 공통인식을 갖게 됐고, 이는 곧 자민당 지지로 이어졌다. 자민당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줄곧 총투표수의 60%에 이르는 안정된 지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좌파의 반대와 당내의 파벌주의로 인기를 잃어 대체로 총투표수의 절반을 얻는 데 그쳤다. 이후 1983년 총선 때까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유지했다.

이번에 자민당이 참패하고 소수야당으로 추락한 것은 경제난에 따라 "바꿔보자"는 국민적 요구가 직접적 요인으로 대두했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지난 50여 년 동안 장기집권에서 빚어진 자책점에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즉 '금권'과 '파벌'로 점철된 일본식 정치에 물린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자민당 집권 시 '록히드 사건'과 '리쿠르트 사건'으로 대표되는 추문이 잇따랐다. '계보정치'라는 후진적 정치구조 또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촉발케 했다. 50여 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정치의 앞날이 궁금하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